

코스피	코스닥
2583.27 (+2.24)	727.41 (-7.18)
금리 (연율)	환율 (원/달러)
2.882 (-0.009)	1389.20 (+9.00)

누가 되든 '自國 우선주의'... K-산업 불확실성 가중

2024 美 대선 <上> 韓 영향은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27일 기준으로 9일 남짓 남으면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벤트로, 동맹 관계가 강력한 한국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 등에도 밀착돼 있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트럼프 vs 해리스 초박빙 마지막 여론조사서 '동률'

트럼프, 법인세 인하 공약 해리스, 공급망 재편 예고 등 韓외교·경제적 파장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자신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법인세 6%포인트(p) 인하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 미국의 외교 정책이 아닌, '자국



길게 줄선 수시모집 응시생들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202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장에서 응시생들이 길게 줄 서있다. /뉴스1

우선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는다.

해리스 부통령이 행정부를 꾸린다 해도 한국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신(新) 냉전 체제에 포함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 '더 디플로맷'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동률' 기록한 트럼프와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 내대학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48% 대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16년, 더 과거로 가면 2000년 대선 당시 전국적으로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주요 선거인단이 걸린 경합주에서 밀려 패배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는 전국적인 판세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앞서려면 전국 지지율에서 긍정적인 수치를 얻어야 한다.

해당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 이민 문제 ▲ 경제 ▲ 낙태권 등의

영역에서 양 후보가 얻은 지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 문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이 54%였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43%다. 경제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관리할 것'이라는 답변(52%)이 해리스 부통령(45%)보다 많았다. 낙태권 보호의 경우 55%대 40%로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다만 유권자의 15%는 지지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정 반대 속성 지닌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층 속성도 반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부분에서 반대 속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범용인공지능 시대, 공존법 모색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오는 11월 20일(수) 오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인공지능(AI)이 가속화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과 공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확장현실(XR),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혁명을 이루는 기술들이 융합되며 초연결사회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거주환경과 노동주체는 물론 전반적인 사회구조가 변화하며 미래 생태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AGI 시대의 공존법을 모색하고 산업과 기업에 일궈줄 변화상을 공유합니다.

- ◆ 주 제: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 ◆ 일 시: 2024년 11월 20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 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 문 의: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성을 지닌다. 해리스 부통령은 1946년생(78세)으로 고�령에 속 여성이며, 흑인 및 아시아(인도)계 미국인이다. 그리고 1964년생으로 60세대.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남성이며,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인재 제일' 철학 굳건... 삼성, 하반기 GSAT 실시

(삼성직무적성검사)

주요 대기업 유일 신입공채 70년간 국내 채용혁신 이끌어 19개 계열사 1만명 안팎 채용

삼성이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 최근 채용문이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삼성그룹은 지난 26일부

터 이날까지 이틀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무적성검사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오전, 오후로 나눠 관계사별로 진행했다. 삼성은 직무적성검사 이후 ▲ 면접 ▲ 채용 건강검진을 거쳐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한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 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E&A,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서울병원,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등 19곳이다.

삼성그룹은 하반기 정확한 채용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삼성 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19

개 주요 계열사에서 1만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2022년 향후 5년간 8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연간 신입사원 공채 규모는 1만 6000여명 정도로 올해도 상·하반기를 나눠 비슷한 규모를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신입사원 채용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된다. 삼성의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

제 최근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경력을 채용하는 등 채용문을 좁히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8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답했다. 하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지난해 조사

보다 7.1%포인트(p) 증가한 42.5%로 늘었지만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이처럼 대기업 공채가 제도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도 삼성은 70년간 유지하고 있다.

'인재제일(人材第一)' 경영철학에 따라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능력 중심의 인사를 구현하고 있는 것. 1993년 국내 최초로 대졸 여성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신설하고, 1995년에는 입사 자격요건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국내 채용 제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 총리, "배추 도매가격 내려 다행... 김장철 공급 최대한 지원" /사진 뉴스1
▲ 與, 북 러시아 파병에 "문 정부 '가짜 평화쇼'가 안보 위기 단초"

▲ 민주 "오물풍선, 올해만 30번째... 의도된 방안 아니면 당장 수 써야"
▲ 여권 친윤·친한 총돌 격화... "공멸 피해야" 우려 목소리 나와



▲ 취임 100일 맞은 조국... 약화한 야권 내 입지 확보 속도 /사진 뉴스1
▲ 두 번째 만남 앞둔 한동훈·이재명 '특검법·특검감찰관' 쟁점되나